KWDI
해외통신

2024년 1월 (2024.1.1~1.3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유럽연합 EUROPEAN UNION

비동의 강간죄에 관한 찬반 공방 지속

곽 서 희 레이든 대학교(Leiden University) 지역학과·정치학과 강사(Lecturer)

- 2023년 12월 13일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유럽위원회), 유럽연합 이사회(European Council), 유럽연합 의회(European Parliament, 이하 유럽의회)가 모인 3자 협상이 열렸다. 의제는 바로 유럽연합 차원에서 채택하고자 하는 여성대상폭력 및 가정폭력에 관한 지침안(Directive on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이었다. 그러나 협상은 성폭력에 관한 정의에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났다. 본 원고에서는 지침안 관련 현재 유럽연합 차원에서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2022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 유럽위원회는 여성대상폭력 근절을 위한 지침안을 발표했고, 이는 이후 유럽연합 차원에서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지침안에서 유럽위원회와 유럽의회는 합의 없이 행하는 성관계를 성폭력이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즉,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피해자로 인정하고 성폭력 범죄가 성립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내용은 현재 논의 중인 지침안 제 5조에 명시되어 있다. 위와 같은 합의에 기반한 성폭력 정의가 이루어져야 피해자를 제도상 전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 이러한 법적 조항이 없는 국가에서는 여전히 피해자 측이 위력이나 위협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성폭력이라는 범죄로 인정되는 데다가, 회원국마다 성폭력을 정의하는 방식이 달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회원국 내 성폭력 피해자, 특히 여성들이 피해자로 보호받고 가해자는 처벌받을 것이라는 제도적 신뢰는 낮고, 신고 및 수사 과정에서 겪게 될 2차 위협이나 사회적 주홍글씨가 두려워서 성폭력 피해를 입고도 사법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 역시 지적되어 왔다.

- 또한 본 지침안은 강제 혼인, 할례, 온라인 성추행, 강제 불임수술 등의 문제를 근절하겠다는 목표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위원회 위원장은 작년 9월, 유럽연합 연례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에서 유럽연합 내 합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성폭력으로 범죄화하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 추진을 밝히고 지지를 요청한 바 있다.

참고자료

- AP News (2023.11.25) "Activists call on France to endorse a consent-based rape definition across the entire European Union", https://apnews.com/article/eu-rape-law-definition-consent-protest-7f73e19bd943e5d2e308143dd51dd555 (접속일자: 2024.1.19.)
- Euractiv (2023.12.14) "Paris under fire after latest refusal to adopt EU-wide rape definition", https://www.euractiv.com/section/health-consumers/news/paris-under-fire-after-latest-refusal-to-adopt-eu-wide-rape-definition/ (접속일자: 2024.1.19.)
- Euranet Plus (2023.9.22), "Defining consent in europe", https://euranetplus-inside.eu/defining-consent-in-europe/ (접속일자: 2024.1.19.)
- Human Rights Watch (2023.11.22), "Human Rights Watch letter to the French Government on the definition of rape in the EU Directive on Violence Against Women", https://www.hrw.org/news/2023/11/22/human-rights-watch-letter-french-government-definition-rape-eu-directive-violence (접속일자: 2024.1.19.)

- 회원국들은 전반적인 여성대상폭력 근절, 강제 혼인이나 온라인 성추행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지만, 성폭력 정의에 있어서만큼은 회원국들의 입장이 찬반으로 팽배하게 갈리고 있다.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등은 찬성하는 반면 프랑스, 독일, 폴란드, 헝가리 등은 이 조항에 반대하고 있다.

- 특히 프랑스 정부의 경우, 시위 및 사회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성폭력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테러리즘, 부패, 성착취와 같은 문제가 아니므로 유럽연합이 지침안에 성폭력 관련 내용을 담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 회원국들이 국내 형법 조항과 내용에 부합하는 방향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합의'를 정의하거나 입증하는 것 역시 매우 모호하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 현재 유럽연합 회원국들마다 성폭력을 범죄로 정의하는 방식이 다르며, 이는 국가의 성평등 수준에 상관없이 양분된 양상을 보인다.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성폭력이라고 규정하는 국가들이 있는 반면, 물리적이거나 심리적인 압력을 통한 성관계로 판명되었을 때 성폭력이라고 보는 형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다. 예를 들어 벨기에는 성폭력을 정의할 때 합의 여부를 포함하는 반면, 이탈리아에서 성폭력은 일정 수준의 힘, 권력, 협박을 가해 이뤄지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 국제인권단체 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중 13개 회원국만 합의없는 성관계를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Human Right Watch는 2023년 11월, 프랑스 정부 측에 유럽연합 지침안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는 공식 서한이자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 최근 몇 년간 프랑스는 성폭력과 기타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왔다. 그리고 합의에 기반한 성관계 최소 연령은 15세로 설정하고 있다. 마크롱 정부는 가정폭력 및 여성대상폭력 철폐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일각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 본 지침안 합의가 무산되자,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유럽의회 건물 앞에서 지침안 통과를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했고, 프랑스 파리에서도 정부가 유럽연합이 제시하는 지침안을 승인할 것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시민단체들의 지침안 채택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여러 회원국들의 제도적 해석이 다르다 보니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난행이 예상된다. 또한 유럽연합 차원뿐만 아니라 회원국들의 국내 정치적·사회적 찬반 논쟁 역시 계속되고 있다.

- 유럽연합의 지침안 협의는 2024년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현재 유럽연합 이사회 의장국(Presidency of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은 벨기에이고, 임기는 6개월이다. 다음 의장국은 지침안에 반대하고 있는 헝가리다. 그동안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왔던 만큼 협상 과정이 쉽지 않겠으나, 앞으로 어떤 결과를 맺게될 지 관심을 두고 지켜볼 만하다.

- Le Monde (2023.11.16), "France opposes draft EU-wide definition of rape", https://www.lemonde.fr/en/international/article/2023/11/16/france-opposes-draft-eu-wide-definition-of-rape_6261066_4.html (접속일자: 2024.1.19.)2024.1.19.)
- Human Rights Watch (2023.11.22), "Human Rights Watch letter to the French Government on the definition of rape in the EU Directive on Violence Against Women", https://www.hrw.org/news/2023/11/22/human-rights-watch-letter-french-government-definition-rape-eu-directive-violence (접속일자: 2024.1.19.)
- Le Monde (2023.11.16), "France opposes draft EU-wide definition of rape", https://www.lemonde.fr/en/international/article/2023/11/16/france-opposes-draft-eu-wide-definition-of-rape_6261066_4.html (접속일자: 2024.1.19.)

영국 UNITED KINGDOM

보건사회부, 2024년 여성건강정책 우선순위(Women's Health Priorities) 발표

임 다 혜 런던열대의학위생대학 국제보건/보건정책학 박사과정

영국 보건사회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는 2024년 1월에 열린 여성건강회의(Women's Health Summit)에서 2023년 발표한 여성건강정책(Women's Health Strategy)의 2차년도인 2024년에 우선순위로 집중할 여성건강정책을 발표했다. 영국 보건사회부는 2024년에 월경통 및 월경 불규칙을 포함하는 월경문제(Period Problems), 성범죄와 가정폭력 피해 여성 및 수감여성 지원, 여성건강연구 지원, 산모 건강과 출산 트라우마에 대한 지원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둘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회의에서 보건사회부 장관인 빅토리아 앳킨스(Victoria Atkins)는 여성건강정책의 1차년도 성과를 "약 50만명의 여성들의 호르몬 대체치료(Hormone Replacement Treatment; HRT) 비용을 절감했고, 모든 지역에 여성건강센터 (Women's Health Hubs)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여성건강장관(Minister for Women's Health)인 마리아 콜필드(Maria Caulfield)는 2024년 여성건강 우선순위 정책에 대해, "월경문제로 고생하는 여성과 여아를 지원하는 것은 그들의 삶, 교육, 그리고 커리어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고 하며, "출산 이후 신체적·정신적 트라우마를 경험한 여성은 해당 트라우마가 그녀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론에서는 여성건강정책의 2차년도 우선순위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월경문제 (Problem Periods) 및 부인과 건강 관련 지원

- 영국 보건사회부는 1차년도에 각 지역에 신설한 여성건강센터에 근무하는 보건 전문가에게 월경과 부인과 건강에 관련한 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다. 해당 책자는 극심한 월경통이나 자궁내막증을 경험하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갱신하여 여성건강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극심한 월경통에 도움이 되는 피임약에 대한 접근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책자에 교육자료를 추가할 예정이다. 영국 통계청(Th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는 월경통과 자궁내막증이 직장에서의 여성의 성과와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것이며, 이는 해당 증상/질환에 대한 진단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성범죄 및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수감여성 지원

- 성범죄 및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지원하는 정책에는 피해 여성에 대한 교육과 지원체계가 원활히 작동하는지에 대한 점검부터, 영국 국가보건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에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 개발하는 체계까지 포함되어 있다. 해당 지원정책에서 주목할 점은 감옥에 수감된 여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감옥에 수감된 여성이 수감 남성과 사회에 있는 여성에 비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문제를 더 많이 겪고, 대부분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추진된 사업이다. 이러한 여성 수감자의 높은 보건사회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2023년 말, 여성 건강돌봄법체계 파트너십(Women's Health, Social Care and Justice Partnership Board)이 영국 국가보건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와 협력하여 신설되었다. 해당 파트너십은 2024년 봄부터 3년간 약 2.1억 파운드(한화 약 355억 원)를 지원받아 여성 수감자의 건강과 돌봄을 위한 연구와 정책이행 및 권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 UK GOV. (2024.01.17.), "Health Secretary announces new women's health priorities for 2024", https://www.gov.uk/government/news/health-secretary-announces-new-womens-health-priorities-for-2024 (접속일자: 2024.01.20.)
- UK GOV. (2024.01.17.), "Women's Health Strategy: 2024 priorities", https://www.gov.uk/government/speeches/womens-health-strategy-priorities-secretary-of-state-speech (접속일자: 2024.01.20.)
- The Guardian. (2024.01.09.), "'Read taboo': include birth trauma in UK women's health strateg, MP urges",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4/jan/09/real-taboo-include-birth-trauma-in-uk-womens-health-strategy-mp-urges (접속일자: 2024.01.25.)
- UK GOV. (2022.02.23.), "New taskforce to level-up maternity care and tackle disparities", https://www.gov.uk/government/news/new-taskforce-to-level-up-maternity-care-and-tackle-disparities (접속일자: 2024.01.25.)
- UK GOV. (2023.11.23.), "A review of health and social care in women's prison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a-review-of-health-and-social-care-in-womens-prisons (접속일자: 2024.01.25.)
- NHS (2023.13.30.), "Three year delivery plan for maternity and neonatal services", https://www.england.nhs.uk/publication/three-year-delivery-plan-for-maternity-and-neonatal-services/ (접속일자: 2024.01.25.)

산모건강과 산모건강격차에 대한 지원

- 산모건강 지원정책에는 기존에 국가보건의료서비스에서 진행하던 산모건강 사업은 물론 산전 건강부터 산후건강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해당 사업의 핵심은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 후의 모든 과정에서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홍보하는 것이다. 특히, 2024년 여성건강정책은 출산 트라우마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출산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여성들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출산과정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를 얻었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에서 많이 발생하며, 많은 경우 출산 트라우마를 겪은 여성은 다음 출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영국의회(UK Parliament)는 관련해서 출산 트라우마의 이유와 경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정책제언을 개발하여 2024년 4월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 산모건강격차에 대한 정책은 인종과 사회경제적 격차로 인해 산전/산후 관리를 받지 못하거나, 유산·사산·모성사망 같은 여러 문제를 경험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함한다. 영국 보건사회부에 의하면, 흑인여성은 백인여성에 비해 유산을 경험할 확률이 40% 높고, 취약계층 거주지역에서 사산아 출산율이 더 높다고 한다. 따라서, 해당 정책은 소수인종여성과 취약계층 거주지역 여성들에 집중한 산모건강정책이다. 해당 정책의 일환으로 영국의 국립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Research)은 약 4.2억 파운드(한화 약 710억 원)를 지원받아 연구자, 정책입안자, 그리고 여성들과 함께 산모건강격차에 관한 연구와 개선방안을 개발할 예정이다.